

#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초당적 협력"

### 국정 정상화 위해 국회와 정부 함께 참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권성동 "국민의힘 여전히 여당" 거부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구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조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공백과 관련한 한미동맹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혼란스러운 외교·안보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라며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

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

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신장 규명과 책임 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며 "공조 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신장 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한민국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 야당도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마지막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총투표수 300표 중 가(可·찬성) 204표." 숨막힐 정도의 적마이 감싸고 있던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야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서는 짧은 환호성이 터졌다. 본회의장 앞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보좌진들,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취재진 사이에서도 탄성이 흘러나왔다. 이날 본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과 함께 오후 4시 6분 본회의가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와 제안설명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한·위법한 내란사태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투표를 호소하는 제안설명을 20분만에 걸쳐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펼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는 독일 을 처음으로 통일시킨 재상 비스마르크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역사의 문을 펼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고 한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등 숨죽인 표정이었다. 투표가 시작된 뒤에도 엄숙하고 무거

운 분위기는 이어졌다. 투표를 위해 나란히 줄을 선 의원들이 사적으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투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여야 의원 일부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거나 고만하듯 머리를 감싸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조용히 성호를 긋는 등 긴

장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 보였다. 여당 의원 절반가량은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며 침묵 속에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부친이 별세한 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표결에 참여했다. 이윽고 오후 5시 정각, 우 의장이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라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는 순간 그제야 야당 측에서는 짧은 탄성이 터져 나오며 5대 분간의 표결 절차가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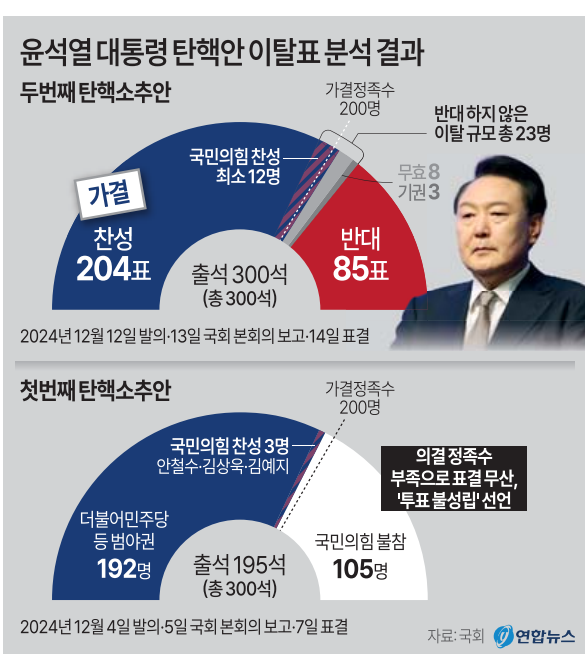
다만 야당 측에서도 발표 순간에만 잠깐 탄성이 터졌을 뿐 이후 지나치게 환호하거나 흥분하는 모습은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재명 대표 역시 본회의 직후 의원 총회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다.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의 모습이 중요하다"며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노종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앞 시민 집회를 찾아 탄핵 여력을 모아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연합뉴스

## 본회의 54분만에... "가 204표" 발표에 짧은 환호성

### 與 12명 이탈표...기권·무효 더하면 23명

'공개 찬성' 7명에 5명 더 찬성 분석...가결 정족수 4표 넘겨

지난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의 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중오·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 본회의 전 당론을 결정한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당론이 부결이니 반대 투표를 해달라. 정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권·무효투표 11명까지 더해 '반대 투표'를 하지 않은 이탈 규모를 23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탈표는 찬성 투표한 12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과 통화...한미동맹 재확인

"외교·안보 정책 차질 없이 수행" 국정수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친 뒤 정실장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체계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등

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게 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임시국무회의의 주제,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 혼란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분야별 첫 지시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75)  
출생 1949년 6월 18일 전북 전주  
학력 서울대 경제학사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합격(84)  
경력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제38대(2007~2008) 국무총리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제48대(2022~) 국무총리  
자료: 국무총리 비서실

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다. 이어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의 주제, 대국민 담화문 발표, NSC 개최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김진수 기자

### '벚꽃대선' or '장미대선'...탄핵심판 속도에 달렸다

'尹 기소시 탄핵심판 정치' 가능성 변수  
현재 기각하면 '조기 대선'은 없던 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또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현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벚꽃이 피는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현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

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현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미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